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년] 시민 60% '자치경찰' 모른다

✎ 박유진 | ⓒ 승인 2023.06.11 20:45

<上> 존재감 미약한 자치경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지난 2021년 5월 17일 인천시에서 수도권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이후 같은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자,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자치경찰 1호 사업으로 선정하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화려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운영 2년차를 넘긴 현재, 인천자치경찰의 존재감은 희미하기만 하다. 어린이 교통사고 50% 감소, 아동학대 신고건수 14% 감소 등의 성과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중부일보는 앞으로 3회에 걸쳐 출범 2년차를 맞은 인천 자치경찰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제언 등을 통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지방분권 취지...제도 전격시행됐지만

전체 1천40명 중 자치업무는 412명

나머지 76%는 국가사무와 혼재돼

"자치경찰이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기존 경찰과는 하는 일이 다른가요?"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만난 김은형(37)씨는 자치경찰에 대해 묻자 난감한 미소를 보였다.

김씨는 '자치 경찰'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스치듯 본 적은 있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도리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은 지난해 7월 인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여부를 알고 있다는 시민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이후 같은해 연말 다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해 알고있다는 응답이 41%로 뛰는 등 다소 높아진 인지도를 보였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아직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뜻도 된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국가경찰 사무에서 특정 업무만 자치경찰 사무로 이름표만 바꿨을 뿐 업무의 내용이 나 조직 구조 면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뉜 상황에서 인력이나 사무의 범위, 권한 등도 명확히 분장·이관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일선의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인천경찰청 현원 6천869명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자치부서 소속 인력은 1천 293명이다.

이중 자치경찰 인력은 1천 40명으로 전체 인원의 15.1%, 자치부서 인원의 80.4%를 차지한다. 자치부서에는 전체 부서 인원의 19.6%에 해당하는 254명의 국가경찰도 포함돼 있다.

현재 1천40명의 자치사무 인력 중 자치사무임이 명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412명 뿐이다. 나머지 628명의 업무는 75.7%의 자치 사무 업무와 그 밖의 국가 사무 업무가 혼재 돼 있다.

일선 경찰 내부서도 혼란 지속상태

시민 59% "잘 모르겠다" 응답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주 업무의 70% 이상이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돼있지만 국가 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자치경찰위는 개입 권한이 없다.

이에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자치경찰위 등으로부터 자치경찰의 취지에 맞는 정책 시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휘·감독·인사권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세종시와 제주, 강원, 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경찰과 분리해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교통과와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지구대·파출소 소속 등의 경찰관 70%가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요구하는대로 권한을 넘기면 인사권, 예산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원 등에 대한 대항력이 약해져 지역유착형 비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일방적인 전출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전북 경찰 직장인협의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이원화 추진에 따른 갈등 해결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유진기자



박유진 pyj@joongboo.com